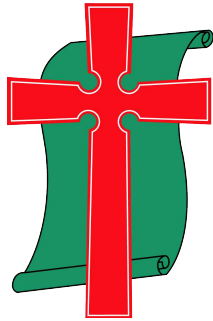


차별금지법 · 평등법 실체를 보라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서울강동노회
노회장 손세용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만배목사

머 리 말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많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장과 대통령까지도 2020년 12월에 평등법안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언급을 했습니다. 평등법은 대한민국 성 윤리를 변혁하려는 줄속입법 처리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외 제 3의성’은 헌법 제36조에 명백히 어긋나는 법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의 성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병역회피 및 교육현장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생물학적 동성이 법적으로 이성이 된다면 ‘동성결혼’을 막을 길이 없어지면서 창조질서에 위배를 초래합니다. 또한 동성애 유전자는 없으며 결코 유전이 아니라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이는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 질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강동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는

- I.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는 주제로 12가지의 전문가의 글을 책자에 담았고
- II.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는 주제로 12번의 강의를 이 책자에 실고자 했습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2021. 4. 봄노회를 기다리면서

서울강동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만배 목사

서 기: 최영숙 목사

회 계: 김동진 장로(A)

목 차

머리말	1
I. 차별금지법 · 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3
1)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해 법적 강제적 노려... 반대의견에 재갈	4
2) ‘남성 · 여성 외 제 3의 성’... 양성평등 담은 헌법 정면으로 위해	7
3) ‘제 3의 성’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위한... 공적 신분체계와도 충돌	10
4)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13
5) 생물학적 동성이 법적으로 이성이 된다면 ‘동성결혼’ 막을 길 없어	15
6)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女스포츠 경기 출전, 과연 공정한가	18
7) 공공장소에서 성도덕 비판했다고 소송... 종교적 표현의 자유 억압	21
8) 동성에게 청혼편지 쓰는 학생들... 동성애 권장 교육하는 영국학교	24
9) 낙태 수술 거부한 의료인과 병원, 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27
10) 차별금지법은 전통과 신앙을 가해자로 몰아 증오 부추기는 법	30
11) 차별금지법 초기 침묵한 영국 크리스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됐다	33
12) “아이는 결혼한 아빠,엄마 밑에서 자라야”판사가 휴게실서 말했다가 해임당해	36
II.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39
1) ‘동성애는 타고 나는것’이라는 미혹을 끊자	40
2) 동성애 전담화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과학’	43
3)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만큼 헌신했는가	45
4)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그러나 유전자 변이는 발견	47
5) 과학적 근거 없는 ‘동성애 성향 뇌구조론’	50
6) 두뇌구 조 또한 타고나지 않는다	53
7)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10%가 말하는 것	55
8) 성호르몬이 동성애에 영향을 미친다?	57
9)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도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	59
10) 동성애자들의 또 다른 자기 합리화 ‘제 3의 성’	61
11) 근거 없는 동성애 진영의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	63
12)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65

(I)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해 법적 강제력 노려... 반대 의견에 재갈

평등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사실상 같다. 평등법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긍정적 언급을 했다.

5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평등법안 공동발의자를 찾고 있다. 문 대통령도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평등법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평등법은 남녀 양성에 기반을 둔 법질서를 뒤흔드는 제3의 성을 도입하자고 한다. 인권위법상 19개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며 성별 정체성을 추가해 뒀다.

특히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의 주관적 감정을 규제 대상인 괴롭힘에 포함해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반대 의견에 법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것도 문제다.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며 편향된 법집행을 해온 국가기관이다.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을 제출했으며 퀴어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지지 연설을 했다.

제3의 성별을 수용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기독교 대학의 동성결혼 영화 상영이나 성매매·낙태·다자성애 특강 금지 조치에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중립적 차별시정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동성애 옹호 투쟁에 앞장서 온 국가기관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법인, 사법상 단체, 사인, 종립대학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에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성 해방·젠더 전체주의 교육 주도 세력의 배후가 됐다.

인권위는 그동안 자신의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2017년 단독으로 내놓은 개헌안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제시한 평등법안도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벌 부과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평등법안 도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그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속 방치된 재소자의 인권,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고 젠더주의 정책 집행과 권력강화에만 몰두하는 인권위와 인권 대통령의 민낯을 보여준다.

평등법안은 종교적 교리에 직접 관련된 경우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놨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민간 자율 제약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기관에만 표현의 자유 보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 외 민간의 영역의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침해하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러한 적용 제외 범위의 불명확성을 입법·사법부가 아닌 인권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기존 성 윤리, 양성 중심의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뒤집으려는 기만술이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대중적 속임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신적 괴롭힘을 규제 대상으로 보면, 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평등법이 통과되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차별시정 대상이 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평등법은 사인, 사기업, 사립학교의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공급 이용,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자율적 활동 업무 영역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겠다는 근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교 제외'라는 임시방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규정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된 양성 중심의 법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들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확고히 현행법제가 남녀 양성만을 수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만약 제3의 성을 법제상 수용하면 주민등록법, 가족법, 병역법 등 각종 법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한다. 화장실·목욕탕 등 성별 이용시설의 변화, 남녀 성별 스포츠경기 운영 문제, 입영대상자 선정 등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혼란이 발생한다.

이 법의 문제점은 제3의 성을 수용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폐해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화장실·탈의실 이용 논란, 성범죄 발생, 스포츠경기의 불공정 논란,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폭증, 기존 성별로 환원하는 것의 어려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장과 대통령의 회담,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현 상황은 인권위의 입법안 요청, 정부 부처 간 협의, 법안 의견 수렴, 규제 심사라는 행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곧바로 국회에서 입법하게 하는, 이른바 청부입법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국민생활 전반에, 종교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술책을 갖고 있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혹시라도 대한민국 성 윤리를 변혁하려는 졸속입법에 가담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 법안 때문에 야기될 피해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성·여성 외 제3의 성’... 양성평등 담은 헌법 정면으로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법안) 가운데 위헌으로 보이는 몇 가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삼분하고 있다. 이는 ‘성별2분법’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에 명백히 어긋난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혼인이 남녀 ‘양성 간’의 결합이며 결합 형태는 남녀가 ‘평등’해야 함을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법안의 성별3분법은 헌법의 남녀2분법 규정에 의심의 여지 없이 위배된다.

혼인과 가정에 요구되는 양성의 평등은 혼인·가족에 한정된 원리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혼인의 남녀 동권은 1948년 건국헌법부터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혼인개념을 ‘두 인격체 간’의 지속적 결합이라고 하면서 헌법의 혼인 규정을 흔들고 있다. 혼인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는 독단이며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법안은 기존 다른 법안들과 달리 성별 정체성의 ‘개념 정의’ 규정을 삭제했고, 법안 제3조 차별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은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해 정의 규정을 두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정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본문에 삽입한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함량 미달이다.

인권위는 성별 정체성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병역회피는 어렵겠지만, 악용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군복무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입대 후 복무 중 본인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성이 강한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해 여군에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인 국가가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건강진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모두 평등 위반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져 있다.

셋째, 법안 제3조 제1항은 '차별의 적용영역'을 기존 4개 영역에 5호를 추가해, 기타 그 이외의 영역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평등의 일반화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로 4개 영역으로 국한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편하게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헌법에 어긋난다.

넷째, 성별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법안 제27조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에 헌법에 어긋나는 성별3분법을 교육해야 하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전문성'에도 어긋난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안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전문성에 대한 침해가 된다.

다섯째, 대학의 경우 이러한 강제는 대학의 자유, 대학의 자치, 교수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신학대학의 경우 그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절대적 사고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진리탐구도 진실발견도 불가능하다.

사물의 바른 이치를 찾아내야 하는 학문의 자유가 설 땅이 없어진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판단은 치열하게 논쟁하는 비판과 반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법안은 성별3분법이나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근본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된다.

모름지기 교육에선 다양한 가치와 보편적 인권의 존중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괴롭힘으로 비칠 수 있어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지금의 인권위법으로도 충분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으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헌법에 어긋나는 성별3분법을 가르쳐야만 하고, 성별 정체성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변질돼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필요 없는 과잉입법이다.

‘제3의 성’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위반... 공적 신분체계와도 충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인권위와 민주당은 이를 ‘평등법’으로 명칭하고 있지만, 필자는 ‘차별금지법’으로 칭한다)을 그대로 받아서 일부 규정만 수정한 다음, 소위 ‘민주당표 평등법안’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인권위와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입법적 오류가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이 ‘성별’ 개념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 규정과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에서부터 ‘성별’ 개념을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여성, 남성으로 구별해 왔고, ‘양성평등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별’ 분류 체계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여성과 남성’ 양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자기 이를 바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둘째,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은 우리나라의 공적 신분체계인 주민등록제도와 충돌한다. 또 이 개념은 도대체 무슨 성별인지도 불명확해 법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미국 뉴욕주는 현재 31개의 성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남성이라는 기존 성별 외에도, 여성과 남성(각 50%)인 사람, 여성스러운 남성, 남성스러운 여성, 여성도 남성도 아닌 사람, 모든 성별을 다 가진 사람, 유동적인 성별을 가진 사람 등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도 31개의 성별, 아니 그 이상의 무수한 성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권국가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해도 안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별' 분류와 신분체계가 연동돼 있어 '성별' 분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로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사회보장번호 등으로 공적 신분체계를 부여하고 있어 '성별'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도 신분체계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성별 개념을 변경해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을 도입하게 되면 당장 성별 분류와 연동된 우리나라의 공적 신분체계인 주민등록제도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 논의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주위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아무리 말려도 모래 위에 우선 건물을 올리고 보자는 식이다.

넷째, 일반 국민은 국가의 공적 신분 체계를 깨뜨리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다. 적어도 국가가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개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도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이 왜 도입돼야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 통계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에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통한 국가의 '성별' 개념 변경 시도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단지 차별금지법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요구 내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와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주장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별'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 남성'이라는 '양성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성별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성별 차이를 부정하고 뉴욕처럼 31가지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면 당장 부모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때 어떤 성별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만일 인권위 등 국가가 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 개념을 부인하고 사회학적 성별 개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연결된 주민등록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한 국가의 공적 신분체계의 대안,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제정된 법률들의 개정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국민 법 감정상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의 도입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별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많은 현실적·법적 우려들이 제기되자 “평등법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과 ‘성별정체성’을 규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속하므로 법령이나 제도가 즉각 변경되거나 폐지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 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입법적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첫째, 차별금지법(평등법)안 제8조는 명시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국가의 다른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으라는 입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 규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다른 법률의 상위에 두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과 국가법령체계 질서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법 규정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사실조차 부인으로 일관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 성별정체성 규정이 도입되면, 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때문에 국가는 당장 이에 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만 한다.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위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란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성별정체성은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률전문가인 필자도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성별정체성은 전문 의사협회나 사회학자를 동원해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법적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은 이를 일반 국민이 알아서 이해하라는 식으로 아무런 법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권위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중대한 입법적 오류다.

셋째, 성별정체성 개념을 정의당처럼 ‘자신의 성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으로 정의하든,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이라는 “인격의 일부로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깊은 느낌이나 내재적인 감각”의 의미로 이해하든, 성별정체성 개념은 결국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객관적 성별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필연적으로 성별의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문제는 이런 성별정체성 규정을 입대나 징병검사를 앞둔 생물학적 남성인 사람이 내심의 생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군에 입대하지 않을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성 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여성복 착용 등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는 차별금지법상 성별정체성 규정에 따라 성별의 변경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남성에게 더는 병역법에 따른 징병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인권위는 형사처분 규정과 징병검사규칙상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토록 많고 다양한 병역 회피 사례가 발생한 게 아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체복무제도는 성별을 남성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이고, 모병제도는 엄연히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전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청년들에게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별정체성 규정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도입할 수 없는 규정이다.

생물학적 동성이 법적으로 이성이 된다면 ‘동성결혼’ 막을 길 없어

법원은 그동안 동성결혼에 의한 ‘혼인 신고’와 관련해 “현행법상 동성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최근에도 여성 레즈비언 부부가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담당 구청 공무원은 동성결혼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주에 걸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과 ‘성별정체성’ 규정은 그 자체로 무슨 개념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 개념이라는 점과 위 규정들이 ‘양성평등 원칙’이라는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살펴봤다.

또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폐지로 이어지거나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적 신분제도와 남북한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도입할 수 없는 규정임을 살펴봤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에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과 ‘성별정체성’ 규정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서야 왜 그랬는지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됐다.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이다.

먼저, 법적인 성별개념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면 생물학적 성(sex)의 개념은 없어지고 미국 뉴욕주처럼 31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동성결혼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수많은 법적 '성별' 중에서 서로 다른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람도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성별정체성' 규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특징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생성하는 등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의 변경만으로도 쉽게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으로는 동성이지만, 법적으로는 성별이 서로 다르게 되므로 결국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청 공무원이나 법원도 법적으로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생물학적 동성이 혼인하겠다고 하는 것을 더는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 가족 제도는 무너지고 만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먼저 도입한 프랑스나 영국 등은 모두 동성 간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관련 문서에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부모1' '부모2' 용어로 바꾸는 법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엄마' '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엄마, 아빠를 부모1, 부모2로 부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평등원칙을 실현해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법에는 이미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인권위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어 그 안에 실제로 넣고 싶어 하는 규정은 국적, 언어, 경제적 차이 등 현실적 차별에 대한 사항들이 아니라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 규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성별' 개념을 도입하고,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규정을 포함하는 무리한 법률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라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다.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는 곧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가해자로 전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것이다.

또 중립적 기준에 의한 의사 표현도 차별로 간주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과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 등이 굳이 국가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리고 공적 신분 체계를 무너뜨리며 병역법상 징병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법적·현실적 문제가 큰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女스포츠경기 출전, 과연 공정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제25조에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한다. 제8조에선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고치되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이들 조항에 따라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스포츠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여성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주장을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5년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성 경기에 출전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10nmol/l(리터당 10나노몰)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엘리슨 헤더 생리학 교수 등이 공동 연구해 2019년 발표한 논문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성전환자 여성: 과학적·윤리적 고찰'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런 인권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운동선수가 호르몬 치료를 받더라도 여성 선수들과 비교해 용인될 수 없는 이점이 있으므로 경기 결과의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을 제시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형성, 골격 구조, 심혈관과 호흡기 체계 등 신체적 요소에 이바지한다.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와 직결된 근력, 속도, 호흡능력과 관련해 테스토스테론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근육 형성과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골격 구조와 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심혈관과 호흡기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은 활동 중인 골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폐활량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 중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운동경기에서 여성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사춘기에 에스트로겐에 의해 여성의 골반이 형성되는데, 남성보다 더 넓은 골반 구조는 엉덩이 넓적다리관절에 현격한 차이를 만든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도의 차이는 관절의 회전과 근육의 이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성들의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는 골격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속도 근력 호흡이 중요한 운동경기에서 여성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에스트로겐과 달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운동경기 능력 발달과 관련된 생리학적 요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스포츠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이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세워지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고환을 유지한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6~10nmol/l 정도다.

IOC는 이를 고려해 테스토스테론 농도 제한 기준을 10nmol/l로 설정했지만, 이는 건강하고 폐경 전인 여성 운동선수들의 테스토스테론 최대 수치인 1.7nmol/l에 다섯 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운동경기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 선수들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다.

둘째, IOC는 성전환자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10nmol/l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전환 이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테스토스테론의 생리적 영향과 Y염색체에 의해 유전적으로 결정된 남성의 신체 구조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불공정성 문제가 있다.

논문은 건강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IOC 기준보다 더 낮은 8.8nmol/l로 감소해도 근육과 근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지속적인 운동과 다른 방법을 통해 이미 형성된 근력의 유지가 가능하며 테스토스테론 제한에도 불구하고 골격 구조, 폐활량, 심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다는 것이다.

사춘기 이후에 성전환한 경우에는 관절, 최대 산소 흡수량 등 남성으로서 타고난 신체적 유리함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IOC의 높은 남성호르몬 제한 기준과 성전환 이전에 갖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성전환자 선수가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보다 월등히 유리하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뉴질랜드의 남자 역도선수였던 가빈 허바드는 2012년 성전환자가 돼 여자 역도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총 6차례나 국제여자역도경기에서 우승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성전환자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과 역차별 논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이의 기대와 달리 평등법이 가져올 미래는 불공정함에 대해 더는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성도덕 비판했다고 소송... 종교적 표현의 자유 억압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전쟁 없이 노예제 폐지를 이끈 윌리엄 월버포스, 파리올림픽 육상에서 우승했다가 중국 선교사로 사역한 에릭 리들, 기독교 변증론의 대가 CS 루이스 등은 영국이 배출한 신앙의 거장들이다. 그러나 영국은 2000년대 이후 개정된 ‘공공질서법과 평등법’(Equality Act)의 시행으로 기독교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종교 비판, 성도덕 비판을 통한 전도가 법적 제재를 받고 동성 커플의 혼인 관련 서비스에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가 소송을 당해 법정다툼을 해야 하는 등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막상 이런 사실들을 소개하면 평등법이 적용된 사건이 아니라는 식의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면 평등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평등법의 영향 아래 다른 이유와 함께 해당 기관 내부 규율 또는 정책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경우나 평등법과 유사한 취지로 관련 법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제의 영향 아래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한 예로, 오순절계 목사인 트레이혼은 교도소에 정원사로 고용됐다가 자원봉사 차원으로 교화 활동인 예배에서 설교를 해왔다. 당시 교도소에는 성범죄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동성애자 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LGBT 옹호 수감자의 민원 제기로 설교에서 배제됐다.

이후 약 두 달간 찬양 인도만 섬겨오던 중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인용하며 “간음 탐색 남색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했다. 수감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그는 사직했다.

그런데도 징계위원회는 그의 종교활동, 낮은 업무 성과와 보안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 및 평등 대우 정책에 따른 '1년 서면 경고'란 징계를 내렸다.

트레이혼 목사는 고용재판소에 제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트레이혼 목사는 자신이 받은 징계 조치가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그의 징계가 성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합당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영국 NHS병원에서 근무하는 크리스천 와스티니는 모슬렘 동료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하며 교회로 초대했다. 그의 직장 동료가 개인적 상담을 해 왔기에 얘기를 나누던 중 상대의 동의를 얻고 기도를 해줬다.

이후 그 동료는 주변인의 압력으로 와스티니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와스티니는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와스티니는 고용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고용재판소는 평등법을 적용하며 "원고 와스티니의 전도행위는 종교적 괴롭힘이지만, 병원 측의 징계는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길가에서 전도하던 해먼드씨는 2001년 '남성 동성애를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설교하다가 물벼락을 맞는 등 군중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때 경찰관이 설교를 그만두고 광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경찰관은 그를 공공질서법 제5조 '소란 야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법원은 "행위자가 질서에 반해 소란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위협적·가학적 또는 모욕적 언행을 실행했다면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해먼드는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은 300파운드의 벌금과 395파운드의 소송비용을 내야 했다.

동성애나 이슬람을 비판하는 표현이나 설교를 한 길가 전도자들이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에는 무죄판결로 풀려나는 이들도 있지만, 법정 다툼을 경험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받는 경험을 하는 이들도 많다.

평등법이 직접 적용되진 않더라도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종교가 도입되면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적 성행위나 소수 종교 교주를 비판하면 모욕적 언행으로 평가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동성애자 축제에 반대(거부)할 권리'를 언급했다가 '혐오'라며 공격받는 것을 봤다. 혐오는 주관적인 증오의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반대 의사는 결코 혐오 발언이 아님에도 혐오로 몰아가는 논리 비약, 독선을 보여줬다. 동성애 찬성만이 인권 친화적이고 반대와 거절은 혐오라고 몰아붙이는 상대 후보의 무서운 전체주의적 태도가 언론을 통해 표출됐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공개적 반대의 경우 괴롭힘 금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돼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신전체주의 사회의 도래인 것이다.

동성에게 청혼편지 쓰는 학생들... 동성애 권장 교육하는 영국학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교육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제27조) 교육영역 등에서 차별 해소를 위해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조 제2호) 교육정책을 포함해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고치되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다(제8조).

평등법이 제정되면 이들 조항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와 성전환의 유해성, 위험성,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양성애·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인권위는 평등법이 제정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교육하진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평등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인권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영국 교육부는 '관계와 성교육 및 보건교육 지침'을 제정해 2020년 9월부터 모든 학교가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침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영국 평등법에 들어맞게 할 것을 명시했고, 각 학교가 자체 규정을 제정할 때도 평등법의 교육 관련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하게 했다.

학교가 성교육과 보건교육을 하면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양성애의 윤리적인 문제와 폐해, 성전환의 위험성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아울러 각급 학교는 평등법상 차별금지 사유를 교육할 때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양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내용까지 교육하라는 의미이다.

'우대 조치'는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등법이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권장 교육은 '신 성교육 과정'에 반영돼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성정이 발달해 감에 따라, 교육 내용이 자신과 관련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또 안정적이고 건강한 동성혼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학교가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성전환을 하고 싶지는 않은지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나아가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정해 주기까지 해야 한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이에 더해 동성혼이나 비혼 동거 등 여러 종류의 비윤리적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영국에서 실시되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병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로스펙트 잡지는 지난해 3월 3일자 보도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S) 산하 젠더정체성개발지원소(Gids)에서 성전환 치료를 받은 통계를 제시했다.

2009년 77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권장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성전환을 원하는 수가 급증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등법이 제정돼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교육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평등법으로 인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은 정상이며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식의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시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교육을 하면 평등법 위반이 되고 해당 학교와 교사는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평등법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교육이 시행되는지를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 학부모들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평등법의 입법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다음세대를 집어삼킬 것이다.

낙태 수술 거부한 의료인과 병원, 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차별금지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과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란 의미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에 따라 낙태는 '임신 또는 출산'이나 기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안도 '성별(SEX)' 용어의 정의 조항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함께 '임신, 출산 또는 이와 관련된 의학적 상태'를 포함해 낙태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제23조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즉, 의료인과 병원이 낙태 관련 의료서비스나 낙태 수술을 거부할 경우, 평등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4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간호사로 근무했다. 그중 18년은 일리노이주 위네바고카운티의 보건부 소속 간호사로 근무했다. 샌드라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돕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2015년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샌드라를 포함한 간호사들은 여성을 낙태 시술소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평등권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평등법의 취지에 들어맞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는 후속 입법에 따라 낙태를 권장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 보건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성교육 강의를 교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젠더'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성교육 내용에 낙태도 필수사항으로 포함했는데, 낙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지만,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게 했다(제2조). 낙태 반대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종교적 관점으로 치부해 학교에서 교육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제정되면 낙태를 반대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도 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조 제5항).

낙태가 합법화되고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는 2012년 9월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단체 '어볼트67'의 회원 2명이 낙태시술소 근처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낙태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며 시위했는데, 현지 법원은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가했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즉,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고치고,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의견을 지난해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최근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인권위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인권위는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 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인바 이후 인권위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의 기본권 이외에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평등법이 인권위가 원하는 자의적인 입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되는 이유다. 평등법은 생명감수성이 결핍된 법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전통과 신앙을 가해자로 몰아 증오 부추기는 법”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참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영국 차별금지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크리스천, 법조인, 교사, 목회자, 사회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의 본질과 향후 일어날 일을 이해하며,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이 법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파벌주의와 성별정체성 정책을 만드는 문화에는 많은 근본 원인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평등 의제’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는 서구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를 ‘평등 의제가 숨겨진 의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평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정치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람을 다양한 소수집단의 특성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사성보다 차이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태어났고, 이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인식으로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란 의제만을 부추깁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자신의 차이점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를 본다고 믿게 만듭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영국에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 평등하기 위해선 자신이 인식하는 권리를 얻도록 싸우게 만드는 현상을 종종 봅니다. 차별 금지 의제의 기반이 되는 철학은 비판적 인종 이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M) 같은 운동으로 이어져 잦은 폭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같은 기만적 형태로도 나타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체를 의심과 멸시의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에선 많은 이들이 영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오히려 해석하지 않습니다. 학계나 정치계, 심지어 학교 교육에서도 영국의 역사를 조롱하고 기독교 유산을 수치스럽게 여길 뿐 그 공적을 기리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이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이론으로 이어져 생물학적 성별을 더는 중요시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슨 성이든 될 수 있고 혹은 아무런 성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지난 30년간 사회에 'LGBTQ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들은 이성애적 관계의 정상적 개념을 해체합니다. 가족을 재정의하고, 가족을 파괴합니다.

또 이성애자들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증식하려 합니다. 차별금지 의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고용 및 주거시설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곧 재화와 용역의 공급 영역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 의제가 가장 강력히 추진되는 영역은 영국의 경우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을 집어삼키고 신앙에 따른 교회 운영에 간섭하며, 심지어 우리의 말까지 검열하려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까지 공격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평등사상에 근거한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반기독교적 편견과 반기독교적 차별이 영국 문화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이 복음에 관한 문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정치인, 법조인이나 교육자에게만 맡겨 뒀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 내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반기독교적 편견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개인이나 그룹을 박해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 누가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편견은 먼저 기독교인을 향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억압적이거나 퇴보적이며 비이성적 혹은 증오로 표현합니다. 평등 의제를 주류로 만들고 동성애자 유명 인물들을 칭송하고 주류로 띄워줍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증오심이 가득하고 퇴보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개인, 고용주, 단체, 심지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편파적으로 다른 종교의 요구는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 등 서구의 주류 정치 및 언론 집단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문화적으로 수용됐고,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편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결혼, 태아의 생명권, 성 윤리에 관한 신념, 낙태, 동성애 등 민감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초기 침묵한 영국 크리스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됐다

오늘날 영국 크리스천이 당면한 큰 문제는 영국문화가 성경적 신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충격적일 정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언론과 LGBT(동성애) 운동 단체가 대중의 의식에 주입한 것은 LGBT의 운동 목적이나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한 반대는 무엇이든 동성애를 증오하는 혐오표현이며 편협하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시기 성경적 기독교 신앙도 같은 방식으로 가차 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공적 영역에서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강하고 분명하게 공적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에 형성되려 하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기독교인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신앙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사랑과 돌봄을 추구했고 “교회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것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대한 진리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방어적으로 크리스천이 동성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만 힘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작되려는 한국에서 성 윤리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영국 차별금지법의 2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로운 실행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성적지향과 젠더전환입니다.

먼저 성적지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지향에 어떤 법적 보호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주된 문제는 법적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성적지향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성적지향' 용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0년 유럽연합(EU)에서 평등체제지침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초안에선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다음에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법률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초안에는 '본 문서의 적용 대상인 성적지향과 그렇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성적지향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 구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본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에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회원국들에 그대로 이전돼버렸습니다. 이는 곧 성적지향과 성적인 행위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적지향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라는 논란에 더해 이제는 그들의 성적인 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돼 비정상적 성행위조차 비판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런 법적인 불명확성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때 성적지향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 이념에 대한 칭송, 완전한 보호와 조장 그리고 사회 내 동성애 관계에 대한 완전한 승인(생활동반자제도 등)과 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한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적지향에 성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지향이란 용어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그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영국 의회는 이런 여러 쟁점을 명확히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명확하지 않은 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회는 2003년 고용·평등·성적지향 시행령 제2조에서 성적지향 용어를 정의할 때 ‘성적지향이란 동성의 사람과 이성의 사람에 대한 또는 동성이나 이성의 사람에 대한 성적지향을 의미한다’처럼 간단한 정의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2010년 개정된 평등법에도 계속 사용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성적지향이란 용어가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매력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입장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에 ‘세계관’ 개념까지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LGBT 운동의 목표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나 동성커플의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LGBT 교육에 대한 반대는 모두 동성애 혐오표현이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결혼한 엄마·아빠 밑에서 자라야” 판사가 휴게실서 말했다가 해임당해

동성애자인 것과 LGBT 운동을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즉 삶에 대한 것이고 LGBT 운동은 정치적 활동과 세계관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모든 사람이 LGBT 운동가는 아닙니다. 모든 LGBT 활동가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현재 영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동성애 윤리, 동성애자 철학, 동성애자 정치학, 성 과학, 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등 게이와 레즈비언에 관한 여러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이념을 교육과 문화에서 주류화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의 목표는 예를 들자면, 영국 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LGBT 의무 교육을 통해 이성애자 기반의 규범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에서 아이들을 동성애화하는 LGBTQ 공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LGBT 운동은 매우 실제적이고 이념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입니다. LGBT 옹호론자들의 로비가 어느 정도로 성공적이나 하면 아이는 엄마 아빠와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더 잘 성장한다고 말했다가 동성애 혐오 표현이라고 여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차별금지 의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크리스천의 인생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리처드 페이지 사건입니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을 처음부터 막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리처드 페이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영국 켄트 지역에서 15년간 모범적 판사로 봉직했고 입양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는 한 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직도 맡고 있었고 능력과 덕망을 인정받았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 관련 보고서가 판사들에게 회람됐습니다. 달콤한 언어로 포장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 커플에 입양된 아이의 성장이 엄마 아빠로 이뤄진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성장보다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두 판사에게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책임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맡은 한 사건 속 아이는 결혼한 엄마 아빠로 된 가정에서 3년을 살다가 입양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남자 동성애자가 그 아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리처드는 동료 판사에게 아이가 결혼한 엄마 아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회학 관련 연구에 따라서도 어린이에게는 결혼한 엄마 아빠의 가정이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람된 보고서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된 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에 따른 것이었고 그도 위탁 부모 역할을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부부는 어려운 가정 출신의 여러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얻은 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는 판사 휴게실에서 나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리처드의 발언은 사법부 징계 위원회에 비밀스럽게 고발됐습니다. 결국, 그 어린이가 동성 커플에게 입양됐음에도 말입니다.

리처드는 재교육을 위한 평등 및 다양성 연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2015년까지 판사직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는 조사 결과 리처드가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편견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아동에게 엄마 아빠로 된 가정이 제일 좋다는 신념을 가진 것이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사건의 판결을 말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로 된 가정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는 단지 그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은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크리스천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도 공감했습니다.

기타 사회과학, 심리학, 인류학적 증거들도 리처드 발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리처드의 주장은 세상 학문으로도 증명되는 것이었음에도 성경적 진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그는 해임됐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그를 의료법인 이사직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의료법인 이사로서 그의 업무는 입양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정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보건부는 그가 그 직위에 계속 있도록 허용할 경우 LGBT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의사가 아니어서 환자를 진료할 일이 전혀 없는 기독교인이 단지 엄마 아빠와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믿는다는 이유로 아픈 사람이 병원 진료를 못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에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선량한 사람이 직장과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Ⅱ)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길원평 교수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라는 미혹을 끊자

동성애는 과연 선천적인가. 동성애는 유전자가 있는가. 이 문제는 유전과학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중요한 갈림길을 제공한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치유는 불가능하다. 동성애자 입장에서 봐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동성애를 운명처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해진다. 타고 났다면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성애자로 결정돼 태어나므로 성적 행위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탈동성애를 위한 상담과 치유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논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과거에 거짓으로 판명된 논문을 진실인 양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짓 논문을 사실처럼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컸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접한 뒤 동성애가 선천이라는 확증편향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 비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낸다.

현대사회에선 동성애 옹호 진영과 반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언론들은 진실 보도보다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 한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논문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이들 논문의 내용은 난해하다. 따라서 대중은 그 내용을 해석하고 편집한 중간 전달자, 대중매체의 의도대로 이해한다. 영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를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들도 많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드라마의 배우가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 말하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으로 둔갑한다.

게다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동성애자가 애처로운 표정을 짓기라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런 드라마와 영화,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으로 믿는다.

내가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건 2006년이다. 당시 국민일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란 큰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읽어보니 차별금지법 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 있었다.

성적지향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학교 성적을 갖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말인 줄 알았다. 궁금해서 차별금지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했다.

그래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300여명의 교수로부터 받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보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법이라고 하니 다들 쉽게 서명해 줬다.

다수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 됐다. 3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분이 동참했고 결국 차별금지법을 막았다.

당시는 건강이 좋지 않아 TV와 신문을 보지 않던 때다. 그런데 우연히 본 국민일보 기사가 계기가 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저지 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차별금지법 찬성 쪽에서는 수년간 법안을 준비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차별금지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만약 그때 국민일보 기사를 보지 않았다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말았을 것이다.

의외로 많은 지식인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과학 지식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아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니다. 자라나는 다음세대가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라는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전 국민이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길 바라며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기획을 시작한다.

동성애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과학’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는 진실을 밝히려는 흐름 속에 진행됐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논문, 동성애자 두뇌가 반대의 성을 닮았다는 논문,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크다는 논문 등이 동성애가 유전이라 주장했다.

그러기에 당시만 해도 수많은 일반인뿐 아니라 과학자들도 동성애가 유전이라 믿었다. 과학계의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동성애는 선천적이므로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정책, 문화, 심지어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등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논문들의 연구결과가 10여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연구팀에 의해 번복되기 시작했다. 논문의 연구결과가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려면 여러 연구팀에 의해 일관된 결과가 나오든지, 대규모 조사에 의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규모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

그런데 동성애의 선천성에 관련된 위의 모든 결과가 번복됐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의도성이 원래의 논문 결과에 포함됐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든다. 실제로 위의 논문 저자의 상당수는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 옹호자였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논문이 나오면 과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색안경을 끼고 의도성이 포함됐는지를 의심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에 유전자 검사로 동성애자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학회에서 발표돼 연합뉴스에도 보도됐다.

그런데 이를 최초로 보도한 '네이처'가 문제 있는 결과를 과장 보도했다고 유럽 생물정보학연구소장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가 비판했다. 문제의 연구결과는 결국 학술지에 실리지 못했다. 해당 연구팀의 선임 박사는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과학계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동성애의 선천성을 믿는 지식인들도 여전히 많다.

뒤돌아보면 동성애자들은 과학이란 도구를 사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퍼뜨렸다. 그들은 과학의 위력을 알기에 미국 정신의학협회 학술대회를 방해하면서까지 회원 투표로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제외했다. 질병 여부를 객관적 과학 연구가 아닌 투표로 결정하게 했다.

동성애 옹호 진영과 반대 진영은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과학 논문 영역도 그중 하나다. 한 편의 논문을 쓰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바치고, 비난을 각오하면서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긴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핍박을 이기고 목소리를 용감하게 냈고 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이기고 재능과 시간을 바쳐 헌신해야 할 때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인들은 핍박받는 자들을 동정하면서 응원한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영향력을 키울 때다.

이 싸움의 승패는 동성애 찬반 진영 중 어느 진영의 사람들이 더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일생을 바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믿는 기독교인이란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만큼 헌신했는가

공식적인 동성애 유전자 연구는 미국의 동성애자인 해머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해머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수재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1993년 남성 동성애와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유명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40쌍의 동성애자 형제에 대한 유전적 분석을 통해 X염색체에 있는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문에서 '남성 동성애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99% 이상의 통계적 신뢰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해머의 논문과 관련된 글이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추가로 실렸다. 하나는 '연구 소식'으로 '동성애 유전자의 증거'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해머의 연구결과로 동성애 유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근접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주의 사이언스'다. '유전학과 남성 동성애'란 제목으로 해머 결과를 간략히 소개했다.

'사이언스'에 실린 글의 파급력은 컸다.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했으며, 많은 사람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지금도 해머의 연구결과는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믿게 하는 대표적 논문이다.

흥미롭게도 2년 후인 1995년 6월 사이언스에 해머와 공동연구를 한 연구원이 해머가 논문 자료를 선별적으로 선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연구윤리국에서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해머 연구실의 연구원인 공동저자가 해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 기사를 인용했다.

오랜 후의 문헌을 보면, 문제를 제기했던 그 연구원은 해고됐다. 연구윤리국 조사는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연구원이 교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기에,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는 의혹이 남았다.

해머 자신이 동성애자이기에 의혹이 더 많았다. 해머의 논문은 동성애 유전자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1999년 라이스 등은 Xq28에 있는 4개의 유전자에 대해 동성애자 형제와 일반 형제의 결과를 비교한 후,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2005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456명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했는데,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에서 해머의 이전 연구결과와 다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해머는 자신의 결과를 번복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10년 라이스를 포함한 연구팀이 112명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했다. 그리고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해머 연구팀의 두 연구결과가 모두 라이스 연구팀에 의해 반박된 것이다. 동성애 찬반 진영의 헌신된 과학자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바쳐 싸우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세미나를 진행하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성애가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동성애는 저절로 확산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노력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기에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서구에선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만큼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헌신해 동성애 확산을 막고 있다. 동성애 옹호·조장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무너진 성 윤리를 바로 세우는 최초의 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그러나 유전자 변이는 발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의 유전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2012년 드라반트 등이 GWAS라는 유전연구방법으로 2만3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전에 해머가 주장했던 Xq28과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

2018년 같은 방법으로 하버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이 동성애자 2만8486명과 비동성애자 46만9437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내용을 미국인간유전학회에서 발표했다.

국제공동연구진은 동성 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녀 47만7522명을 조사한 결과를 2019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도 2018년과 같이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연구진은 동성애 성행동과 관련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 유전자 변이는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되지만, 동성애 행동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이 변이는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이었다. 동성애 자체를 직접 유발하는 유전자는 확실히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신적 특징과 관련한 유전자는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동성애자 수십 명, 많아야 수백 명을 조사해 동성애 유전자의 존재를 탐구해 왔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 수십만 명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동성애자를 조사했지만,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다.

90년대에는 조사 대상자의 수가 작았기에, 불행하게도 연구자의 의도적 편집에 따라 결과가 과장될 수 있었다. 이제는 조사 대상자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가기 어려우며, 그러기에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하게 된다. 이제는 대다수의 과학자가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를 추가로 소개한다. 유전에 관련된 행동양식이 아주 단순한 생명체는 1~2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한다.

백보 양보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해야 한다. 수많은 유전자가 조금씩 변화돼 다른 행동양식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동성애의 행동양식이 아주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돼야 한다. 즉,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동성애적 경향이 강화돼 동성애자가 나와야 하고 동성애가 사라질 때도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사해 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증거한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동성 간 성행위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유전이 되려면, 즉 유전자가 다음세대로 전달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런데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적일 수 없다.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는 다음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진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해서 존재하려면, 그 집단의 성인 한 명 당 한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 다른 동성애자를 만나 커플이 된다. 커플이 된다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성 간 성행위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다음세대로 전달될 수 없다. 만약 동성애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있었다면 점차 줄어들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도 동성 간 성행위가 존재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며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행위임을 뜻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동성애 성향 뇌구조론'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 중의 하나는 두뇌와 관련된 이론에서 나왔다. 수정란이 자라 두뇌가 형성되는 시기에 호르몬 이상으로 동성애를 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추론에는 임신 기간 중 동성애 성향의 두뇌가 만들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그 두뇌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다.

1991년 동성애자인 리베이는 성적 행동과 관련된 두뇌 부분인 INAH를 조사해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두뇌 조직은 대도시 병원에서 죽은 41명에서 선택했다. 표본은 남성 동성애자, 남성 이성애자로 추정된 자, 여자였다.

리베이는 INAH를 네 부분으로 나눠 비교했는데, 남성 동성애자의 INAH3가 여성과 비슷하고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이용해 성적지향(동성애)이 생물학적 기본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는 이것과 관련된 글이 2개 실렸다. 하나는 '뉴스와 코멘트'에 실린 '동성애는 생물학적인가'란 제목의 글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뇌에 대한 새 연구는 그 답이 옳다고 하는 것 같다. 이번 '사이언스'에서 동성애의 적어도 일부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사이언스'에 실린 글은 반대 성을 닮은 두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리베이 논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남성 이성애자가 진짜 이성애자인지 알 수 없었다. 남성 이성애 추정자 16명 중 6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는데, 남성 이성애자가 에이즈로 죽을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성애자라고 추정한 남성 중 에이즈로 죽은 사람은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INAH3 경계를 구별하기 어려워 연구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셋째, INAH3 크기가 동성애를 하게 했는지, 혹은 동성애자로 산 결과 INAH3 크기가 작아졌는지 알 수 없다.
둘째와 셋째 문제점은 리베이 논문에서 언급했고, 세 번째 문제점은 '뉴스와 코멘트'에 언급됐다.

리베이 논문이 나온 지 10년 후인 2001년 바인 등은 여성 이성애자, 남성 이성애자, 남성 동성애자로 구성된 82명을 선택해 INAH 네 부분의 크기, 신경세포인 뉴런 수 등을 조사했다. 남녀 이성애자는 에이즈에 걸리면 INAH3 크기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 동성애자는 모두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러기에 리베이의 연구결과처럼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고 여성보다 컸지만, 에이즈 때문에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INAH3의 뉴런 수를 측정하니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지만,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와 비슷했다. 그래서 바인 등은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작은 이유를 후천적 영향으로 봤다.

그동안 인간 두뇌의 남녀 차이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낸 유일한 부분은 INAH3인데, 여기서도 동성애와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1992년 알렌 등은 양쪽 뇌를 연결하는 앞 연결부 단면이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처럼 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라스코 등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1997년 비숍과 왈스텐은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량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2년 동안 49회 조사를 종합한 결과 남녀 차이는 없었다.

90년대 동성애자 두뇌가 반대 성을 닮았음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됐다. 하지만 최근 그 연구 결과가 모두 번복됐다. 그러므로 동성애자 두뇌가 반대 성을 닮아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은 없다.

최근 과학계는 두뇌 구조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학습 경험 등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두뇌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두뇌 구조 또한 타고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두뇌 구조가 타고나며 그 두뇌에 의해 행동이 이뤄진다고 봤다. 이제는 후천적 훈련과 학습 등의 행동으로 두뇌 구조가 변한다고 본다.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신생아일 때 남녀 두뇌의 성질, 기능뿐 아니라 행동 양식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두뇌의 신경망은 소아기의 학습,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빠를 때는 1초에 200만개 신경망이 연결된다. 1세 때 성인 두뇌 크기의 70%가 되며 3세에 두뇌 신경망 대부분이 형성된다. 2~4세에 남녀 두뇌 구조와 행동 양식에 차이가 나타나기에 후천적 학습,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형성된 두뇌 구조도 학습 경험 상상 등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두뇌 구조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뇌 구조를 오히려 우리가 만든다.

두뇌 변화는 어린 나이일수록 쉽게 일어난다. 훈련을 통해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경회로는 소멸된다. 5세 이후 두뇌 크기에 큰 변화는 없지만, 내부 구조는 계속 변한다. 20대 초반까지 두뇌 성숙이 진행되며, 신경세포가 자라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성인의 두뇌도 훈련하면 얼마든지 변한다. 육체적 기술을 마음으로만 연습해도 두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두뇌 활동만 했는데 변화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하는 상상을 자주 해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 관련 두뇌 부분이 커졌지만, 은퇴 후 작아졌다. 이처럼 어떤 일을 반복하면 두뇌의 미세구조까지 변화된다. 특히 성행위처럼 쾌감을 느끼면서 반복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동성애자 두뇌에 차이가 있다면 반복적 성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환경 자극이 두뇌를 변화시킨다는 증거는 많다. 충격적 사건 후 생기는 외상 후스트레스장애는 대뇌변연계 앞쪽에 변화를 일으킨다. 어린 시절 스트레스와 학대가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성적 학대를 받은 여자아이는 학대받은 나이에 따라 두뇌 변화가 달랐다. 9~10세면 뇌량에, 14~16세면 전두 피질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성경험은 당연히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 의사인 도이주는 인간의 뇌가 평생에 걸쳐 변한다는 뜻의 두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을 설명하며 자극받는 뉴런들이 한 덩어리로 작동한다는 신경학적 원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두뇌는 불변한다는 20세기 신념을 버리라”고 했다. 성과 관련 없는 신체의 일부분을 성적 흥분과 자주 연관 지으면, 결국 그 부분이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적 흥분과 함께 동성을 향한 감정적 집중을 반복하면, 동성애가 마음 깊이 뿌리박힌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두뇌 가소성 때문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며 이성애자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얼마나 집요하게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이주는 다양한 행동양식은 두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 있지만, 이 연관성도 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몇 달 동안 악기 연주와 같은 다른 활동에 몰두해 특정한 성적 행동을 중지하면, 두뇌의 특정 부분에서 생기는 성적 반응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

성적 행동에 관련된 두뇌 구조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원리가 적용되므로, 동성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훈련을 많이 하면 자동차 운전, 무술 고단자의 행동, 악기 연주 등의 행동이 거의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깊이 빠지면 선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속했기에 선천적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10%가 말하는 것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나뉘어 두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 게다가 같은 어머니 자궁에서 자라나기에 모든 영향을 같이 받는다.

따라서 동성애가 유전자와 태아기 호르몬 등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 비율을 가져야 한다. 만약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천적 요인이 있다면 일란성 쌍둥이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면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1952년 칼만의 연구에서 동성애 일치 비율이 일란성 쌍둥이는 100%이고 이란성 쌍둥이는 대략 15%였다. 위 결과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1991년과 1993년 베일리 등의 연구에서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는 52%, 이란성 쌍둥이는 22%였다. 형제는 9.2%, 입양 형제 11%였다. 여성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는 48%, 이란성 쌍둥이는 16%, 형제 14%, 입양 자매 6%였다.

이 결과에서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 유전자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와 형제보다 월등히 높기에, 동성애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오해를 갖게 했다.

이 결과는 대중매체에 광범위하게 소개됐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해머의 동성애 유전자 연구결과와 리베이의 동성애자의 두뇌 연구 결과 등과 함께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인 양 일반인과 과학자까지도 믿게 했다.

그런데 위의 베일리의 연구 결과는 동성애 옹호 잡지와 신문을 통해 조사대상을 모집했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고, 동성애자인 쌍둥이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응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원자 오류'라 부른다.

이제부터 대규모로 조사해서 얻은 결과를 소개하겠다. 최근에는 국가가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쌍둥이 기록을 이용해 연구한다. 그 예로 유럽에는 60만명의 쌍둥이 기록이 있고 호주에는 2만5000명의 쌍둥이 기록이 있다.

2000년 베일리 등이 호주의 3782명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남성 11.1%, 여성 13.6%였다. 2000년 켄들러 등이 미국의 1512명을 조사한 결과는 18.8%였다.

2010년 랑스트롬 등이 스웨덴의 7652명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 9.9%, 여성 12.1%였다. 조사대상이 많을수록 통계적 신뢰도가 증가하기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 정도라 볼 수 있다.

그런데 10% 일치 비율도 전부 선천적 영향이라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에 의해 후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으며,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흉내를 내어 다른 쌍둥이도 동성애자가 되기 쉽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모든 선천적·후천적 영향 등을 합쳐도 일치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성애자가 되게 하는 선천적 영향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은 선천적으로 동성애가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내 문헌을 보면, 1991년 베일리 등의 연구 결과가 동성애가 선천적인 증거로 인용된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대규모 조사 결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일반인이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성호르몬이 동성애에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 옹호 진영에는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자궁 안에서 영향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인체 구조가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유전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하도록 인체구조가 형성돼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성호르몬이 동성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성인인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보면 전혀 차이가 없다. 몸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분비량에 차이가 있어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추측은 맞지 않는다.

예전에 서구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성호르몬을 강제 주입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다. 성호르몬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성적지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논문을 2000년 윌리엄 등이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기 전 태아기 호르몬이 손가락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여성은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거의 같지만, 남성은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짧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윌리엄 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축제에 참여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적지향을 묻고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의 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예상한 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손가락 길이의 비가 적었으며, 여성 동성애자는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 사이의 값을 가졌다. 윌리엄 등은 여성 동성애자가 여성 이성애자보다 남성애에 가까운 손가락 길이의 비를 가진다는 결과를 이용해 여성 동성애가 태아기 호르몬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제부터 이 연구결과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 미국 여성 동성애자 비율은 대략 2%에 불과하다. 논문 결과로부터 분포를 유추하면 여성 이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분포가 거의 겹친다.

어떤 손가락 길이의 비를 가져도 여성 이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보다 50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남성에 가까운 손가락 길이를 갖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남성에 가까운 손가락 길이를 가진 여성 중 대다수가 이성애자다. 이것은 손가락 길이를 결정한 태아기 호르몬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게 할 만큼의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 않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추가 반론으로 윌리엄 논문에서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는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태아기 호르몬이 여성에게만 영향을 주고 남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2004년 태아기 호르몬을 측정하고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의 손가락 길이를 측정했다. 그 결과 남녀 모두 태아기 호르몬과 손가락 길이 사이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태아기 호르몬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동성애자 두뇌를 연구할 때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태아기 호르몬이 남성의 두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가정했다.

국내 문헌에선 손가락 길이의 비를 측정한 윌리엄 등의 결과를 인용하며, 동성애가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형성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은 거의 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동성애가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형성됐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태아기 호르몬을 핑계로 동성애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의 하나로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형 효과’라 부른다.

‘형 효과’를 주장하는 논문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조사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규모 집단을 조사한 뒤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했던 논문들이 훗날 번복됐기 때문이다. 예로 2006년 200만명의 덴마크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형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형 효과’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논리는 이렇다. 어머니가 남자 태아에게 면역반응을 일으켜 동성애 성향이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감기에 걸리면 몸에 감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첫 번째 남자 아기를 가졌을 때 어머니의 몸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겨 두 번째 남자 태아의 뇌를 공격해 동성애 성향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허황된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간단하다. 어머니 몸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면, 가장 남성적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정액에 문제가 생기든지, 고환 관련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일반인보다 동성애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남성에 대한 면역반응이 가장 남성적인 고환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두뇌의 남성적인 부분만 공격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머니 몸에 생긴 항체가 남성적인 장기를 공격한다면 남자 성기의 발달에도 영향을 줘야 한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의 성기가 이성애자보다 통계적으로 더 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태아의 생식기를 공격했다면 남성의 사춘기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사춘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항체가 태아의 뇌를 공격했다면 읽고 쓰는 것과 관련한 학습장애도 같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말을 더 잘하며 학습장애가 없다. 남성 동성애자의 남동생이 이성애자가 된다면, 어머니의 면역반응 때문에 많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늦게 태어난 남자 아기는 체중도 많이 나가고 고환암에 걸릴 확률도 낮다. 읽는 능력도 뛰어나 어머니의 면역반응을 겪은 흔적이 없다.

‘형 효과’의 심각한 문제점은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여자 형제들만 있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는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동성애자의 불과 17% 정도만 ‘형 효과’로 설명 가능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형 효과’가 옳다면, 동성애를 갖게 만드는 원인이 적어도 두 종류가 있어야 한다. 한 부류는 면역반응에 의해 신경학적으로 손상을 입어 동성애자가 되고, 다른 부류는 다른 원인에 의해 동성애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두 부류의 동성애자를 나누는 생물학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행동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형 효과’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머니의 면역반응 이론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그럴듯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동성애 옹호 조장세력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고 집요하게 논문을 발표한다. 데이터를 수집해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게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요한 노력을 보면서, 이것에 대항하는 크리스천 학자들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구에서 동성애가 확산된 근원적인 이유는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동성애 옹호 주장이 주류가 됐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선 안 된다. 적어도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보다는 더 헌신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조국 대한민국을 동성애 쓰나미로부터 지켜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또 다른 자기 합리화 '제3의 성'

과학 발달에 따라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했던 근거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자 동성애 옹호 진영에선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중의 하나가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간성(intersex)을 든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육체의 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결정된다. 수정란에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의해 정소, 난소, 성 기관 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육체의 성은 뚜렷하게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아주 낮은 확률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이 만들어진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로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과 그 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성염색체는 정상 여성의 경우 XX, 정상 남성은 XY이다. 성염색체 이상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발달 장애로는 X염색체 하나만 있는 터너증후군과 XXY, XXYY, XXXY 등으로 X염색체를 두 개 이상 가지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다.

터너증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2차 성징이 결여되고, 가슴이 발육되거나 임신을 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짧은 목과 작은 몸집을 갖고 성인이 돼도 키가 작은 경우가 많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호르몬 이상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렇지만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면 유방이 발달하고 생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 키가 더 크기도 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성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 생긴다.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남성이지만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 크기가 작고 생식 능력이 불완전하다. 지능은 정상이지만 학습능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읽고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경우는 사춘기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간성을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해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에 따른 선천적인 성기형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국내 문헌에 따르면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앓는 환자 중 일부는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이들 중 일부는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클라인펠터증후군 자체가 동성애를 일으키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된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외모가 또래 친구들과 다를까 봐 청소년기에 느끼는 불안정한 성적체성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가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선천적인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 아니고 후천적인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됐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간성은 선천적인 성기형의 일종이며 동성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최근에는 'LGBTQI' 라고 해서 간성(Intersex)을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등과 같은 부류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간성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생물학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LGBT 등은 생물학적 문제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간성을 이용하고 있다.

대다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은 정상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육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간성을 핑계로 대면서 자신들의 성 행태를 합리화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없는 동성애 진영의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

서울시교육청이 만들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 때문에 논란이 많다. 학부모단체에서는 성평등과 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등도 동참하는 서울 목회자 186명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다음세대가 왜곡된 윤리관을 가질 것을 염려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동성애를 유전으로 오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5년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1%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봤는데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원적 이유가 됐다.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일반인들은 여전히 편향된 언론과 그럴듯한 논리에 의해 현혹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동성애자 중에 선천적 동성애자와 후천적 동성애자, 두 종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두 종류를 구별하는 과학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후천적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끊을 수 있지만, 선천적 동성애자는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주장은 반증할 수 없다. 동성애를 끊으면 후천적 동성애자가 되고, 끊지 못하면 선천적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위 주장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두 종류의 동성애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 두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둘째,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나중에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도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에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나중에 드러났는지,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됐는지를 분간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한 논리이기에 틀렸음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논문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국내 언론에 '모든 사람의 절반은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남성에게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절반 이상의 여성과 절반의 남성이 가진다면, 남성 동성애가 집단 내에서 낮은 빈도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문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동성애 유전자를 가짐을 증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절반 정도가 동성애 유전자를 가져야만, 동성애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결과는 오히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최신 과학으로도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럴듯한 논리로 현혹하는 것 같다. 이러한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집요하게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기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더라도 청소년 동성애자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동성애, 성전환 권장 교육을 한 영국은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증가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기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더라도 청소년 동성애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그럴듯한 과학적 논리로 집요하게 강변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들의 모든 논리를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현혹당하지 않는 데 필요하다.

동성애의 선천성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근거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변형됨으로써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동성애에 관련된 유전자 수가 많으면, 그 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므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핵심적 유전자 중 한두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동성애가 생기는 것인가. 한두 개의 유전적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들이 제법 알려져 있다. 예로 다운증후군 루게릭병 등이 있다. 이런 유전적 결함은 육체적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행동양식에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

동성애가 돌연변이에 의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돌연변이로 생겼다고 보기에, 동성애 빈도가 너무 높다. 다운증후군과 같이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 0.25% 이하의 빈도를 갖는다. 그러한 유전질환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성애와 양성애의 빈도를 합치면 2% 이상이기에 돌연변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 너무 빈도가 높다.

동성애를 유전으로 볼 수 없는 다른 근거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을 처음 느낀 나이와 사춘기를 겪는 나이를 비교해 보면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사춘기를 겪는 나이는 환경에 의한 영향이 적고 생물학적 사건으로 이뤄져 유전적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사춘기를 겪는 나이는 12세 근처에 모여 있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을 처음 느낀 나이는 넓게 퍼져 있으며 불규칙한 분포를 가진다. 그러기에 사춘기는 대부분 유전적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동성애는 환경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사춘기처럼 특정한 나이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 빈도가 다름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1994년 미국 시카고에서 '14~16세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와 '지난 1년 동안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는가'를 물어봤다. 지난 1년간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던 남성들이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는 시골이 1.2%, 중소도시 2.5%, 대도시 4.4%였다. 지난 1년간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들이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도 시골이 0.7%, 중소도시 1.3%, 대도시 1.6%였다. 남녀 모두 대도시에서 자랄수록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랄수록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2006년에 200만명의 덴마크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도 도시에서 태어난 자가 시골에서 태어난 자보다 더 많은 동성애 파트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가 유전적 요소보다 자란 환경, 즉 후천적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보여준다.

이런 논리와 근거는 대부분이 화이트헤드 책에서 인용했다. 그는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동성애 관련 논문들을 집대성해 반박 논리를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그의 책을 기반으로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라는 두 권의 책을 한국어로 출판할 수 있었다.

외국 과학자 한 사람의 헌신이 동성애 확산 반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과학적 재능과 시간을 윤리·도덕과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